

특집 : “변환기, 새로운 도서관상을 모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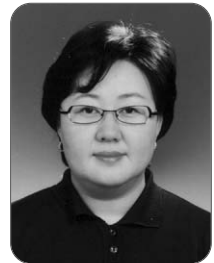
⋮

## “불안한 기대”와 “두려운 현실” 사이에서 길 찾기

●●●

송경진

경기도 문화정책과  
도서관정책담당(사무관)  
librarypm@gg.go.kr



2007년 4월 5일로 개정 「도서관법」이 발효되었다. 정식으로 법이 시행되고, 법에 따른 효력이 생기게 되었다는 말이다. 법의 발효와 함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운영,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 등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 역시 바쁜 행보가 예상된다.

법명의 변경, 대통령직속 위원회의 설립, 기존의 법에서는 찾아

볼 수 없던 지식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책무까지를 규정한 파격적인 법 내용과 이에 따른 도서관관련 기구의 설치에 대한 조항들은 분명 도서관계의 외연적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의 도서관에 대한 투자와 일반 대중 및 언론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들은 그 동안 담보상태에 있던 도서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듯한 분위기다.

하지만, 지역 공공도서관의 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도서관계를

둘러싼 지금의 환경이 무작정 ‘장밋빛 기대’ 만을 품어도 좋은 것인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다.

새로 개정된 「도서관법」은 지방자치제도 하에서의 지역 도서관정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역대표도서관 및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한 것 이외에도, 장애인 및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도서관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공공도서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규정, 기부와 기금사용에 대한 조항까지 포함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정작 공공도서관 현장에서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인력확보다. 현행 시행령에서 정한 사서인력 배치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공무원 총액임금제는 도서관의 인력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시설을 확충하고, 자료구입을 지원하는 일도 도서관을 운영할

공공도서관에 강요되는 서비스우위의 논리, 마케팅논리에 매몰된 공공도서관에 대한 평가, 이용자만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 운영과 이에 따른 도서관직원들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조건 등은 새로운 도서관상을 정립하고, 바람직한 도서관 발전 방향의 모색이 요구되는 요즘에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충분한 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무의미한 일이다. 이런 파장의 연장선상에는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진다. 도서관 위탁 운영 문제다. 정식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배정하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또 다시 도서관 위탁 운영을 들고 나오고 있다.

변환기에 있는 도서관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는 특집란에서 왜 총액임금제와 위탁운영 문제를 꺼내는가하고 의아해할 독자들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에 강요되는 서비스우위의 논리, 마케팅논리에 매몰된 공공도서관에 대한 평가, 이용자만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 운영과 이에 따른 도서관직원들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조건 등은 새로운 도서관상을 정립하고, 바람직한 도서관 발전 방향의 모색이 요구되는 요즘에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도서관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도서관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에 따라 꾸준히 변화해 왔으며,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장서의 보존, 지식의 축적, 정보의 활용 같은 도서관의 고전적 가치 외에도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새로운 역할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서 건전한 사회의 유지를 위한 공공의 가치를 전파하고, 토론과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공간으로 기능하며, 대중교육에 다시 그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논의<sup>1)</sup>는 요즘의 공공도서관 현실에 비추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서의 보존, 지식의 축적, 정보의 활용 같은 도서관의 고전적 가치 외에도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새로운 역할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경영학적인 관점의 접근은 아무런 행정적, 제도적 지원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자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의무와, 책임을 증폭시킴으로써 도서관 현장 근무 사서의 업무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켰고, 이용자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서관서비스의 강조는 대중지식의 고양이라는 공공도서관 장서개발 목표를 약화시켜 공공도서관 장서의 질적 발전을 가로막는 데 한몫했다. 물론, 마케팅개념의 도입을 통한 다양한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개발 및 홍보 활동 강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통한 도서관 이미지의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도 많았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토대는 생각하지 않고 도서관 인프라가 발달한 서구의 추세를 따라가다 보니 부정적인 역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었고, 그 파장이 그대로 공공도서관 현실에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희망의 학교도서관(삼성, 한겨레)”, “거실을 서재로(조선일보)”와 같은 언론매체와 기업이 주도하는 독서운동이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도

1) 『도서관 세상을 바꾸는 힘』, 로널드 B. 맥케이브 지음, 오지은 옮김, 2006, 이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연초에 지인의 초청으로 한 포럼에 참가한 일이 있었다. 기업인들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환원 차원에서 기금으로 조성한 돈을 가지고 어떤 사회공헌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포럼의 주제였고 그 포럼을 통해 제안된 모델이 저소득층을 위한 육아와 공부방을 겸하는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것이었다. 솔직히 그 때의 나의 기분은 ‘드디어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자괴감이었다. 도대체 사람들은 도서관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엄밀히 이야기해서 그 날의 발표모델은 전혀 ‘도서관’에 대한 모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었고, 오히려 지역보육센터라고 해야 합당할 모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서관’이라는 명칭이 버젓이 붙여졌을까? 내 나름으로 해석해 본 결과는 우선, ‘어린이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잘 알려진 그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그러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모델의 제안을 이끈 주체들이 지역사회의 빈곤아

**일관된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의 제시 없이 도서관이 사회운동의 수단으로, 생색내기용 치적사업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은 충분히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운동집단이라는 것이었다. 우려되는 것은 그 사례가 어쩌다 돌출된 희귀한 사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방송프로그램과 함께 유명해진 ‘기적의 도서관’은 독서운동단체를 도서관건립지원단체의 외양으로 변모시켜버렸다. 도서관의 전범은 도서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해지고 있으며, 민선 지방자치시대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역의 도서관 수요를 무시한 채 ‘어린이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짓기에만 관심을 모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면 좋지 뭐가 문제냐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일관된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의 제시 없이 도서관이 사회운동의 수단으로, 생색내기용 치적사업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은 충분히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공공도서관의 현실은 두렵다. 법이 바뀌고 제도가 보완되면 현실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은 오랫동안 길들여진 좌절의 경험에 꺾여서 웬지 불안하고 조마조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현실은 극복

이제 공공도서관에서는 책과 정보를 찾는 이용자 교육만이 아니라 도서관의 책무와 사회적인 기능의 모색을 위한 담론을 생산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해야하고, 기대는 실현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공공도서관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품게 하는 기대들은 있다. 새로운 길은 이런 희망의 토대 위에 세워졌으면 좋겠다. 도서관이 낡고 고루한 권위적인 지위에서 끌어내려진 것은 가장 희망적이다. 이제는 도서관이 숨소리까지 들릴 듯한 침묵 속에서 책만 읽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때로는 과도하지만 당당하게 도서관에 서비스를 요구하는 이용자들은 오히려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길 찾기에 확실한 우군이 되어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이 공공도서관에 가지고 있는 관심을 잘 이끌어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가 아닐까 한다. 그래서 이제 공공도서관에서는 책과 정보를 찾는 이용자 교육만이 아니라 도서관의 책무와 사회적인 기능의 모색을 위한 담론을 생산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서관은 만인에게 평등하지만, 일반적으로 베풀어주는 기관이 아니라는 공통의 합의가 필요하다.

왜 도서관이 체계적인 계획과 준비 속에 세워지고 운영되어야 하는가를 이용자와 공감할 수 있어야 모든 문제의 접근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한다. 이용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것, 그를 통해 이용자들의 도움을 끌어내는 것이 당면한 위기를 헤쳐나가는 첫 번째 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희망적인 것은 어쨌거나 「법」을 바탕으로 한 제도적인 ‘보호장치’ 들이 정비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사서직 관장을 보하라”는 조항처럼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상황이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그 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들이 삽입된 것은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다. “충분히 잘 기능한다면”이라는 전제하이기는 하지만 ‘도서관연구소’

의 설치는 그 동안 부족했던 정책자료들을 보강해 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 모든 정책은 정확한 통계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 도서관계의 통계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모자라는 부분이 많았다.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인 통계와 분석이 뒷받침된다면 그 만큼 실제적인 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각 광역지자체별로 설치하도록 한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역시 시·도지사에게 위원장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차원의 정책수립과 시행이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식상한 이야기지만, 새로운 도서관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사서들부터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희망을 품기에도 지칠만큼 오랫동안 답보상태에 있었던 도서관의 현실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적극적이고 도전적이어서 부담스러울 만큼 활기찬 사서들을 만났던 기억이 별로 없다. 스스로 변하지 않고 머물러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도 이끌어낼 수 없다. 일터이자 삶의 터인 공공도서관의 제 자리 찾기를 위해서는 말할 것, 싸울 것, 얻어낼 것, 바꿀 것과 같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참 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야 한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는 이 많은 일들을 위해서 이제는 사서들의 확고한 연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마지막 생각이다. 우리 사회 어디에도 이렇게 많은 인구를 가진 직업군을 대표하는 활발한 조직 하나가 없는 것은 사서직뿐이 아닐까 한다. 사서직처럼 한 직렬에 이렇게 다양한 직급과 조직과, 소속기관이 나뉘어 있는 경우도 많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사람간의 유대가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라도 달라진 환경과 함께 탄탄한 사서직들의 연대를 통해 ‘불안한 기대’와 ‘두려운 현실’이 ‘굳건한 희망’과 ‘설레는 미래’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꿈꿔본다. (☺)